

열린마당

# 학교, 교육권 보장 주체돼야

도의원  
김동길



얼마 전 한·미 FTA 관련 쏫볼 집회에 참석한 고등학생이 수업 도중 조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쏫볼 집회의 성격이나 내용은 뒤로 하고 학생의 고유 권리라 할 수 있는 교육권의 침해가 있었다는 그 자체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학생이 무슨 잘못을 하였건,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신성한 장소이다.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침입에도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권, 더 나아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 못되어 있는 것 같다. 아니 학교라는 곳이 학생들의 인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느낌이 든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간과한 경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에 적절한 대응하지 못한 교육계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야 할 것이다.

우리의 선생님, 그리고 학교는 부당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신성한 권리가 주어져 있다.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 또한 당

당한 권리로서 막아야 하는 것이다.

학생에 대한 교육권 침해뿐만 아니라, 과거 수업 도중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대상 학부모의 거센 항의와 물리적 폭력,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이 종종 있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성한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적 절차를 무시하고 학생과 선생님의 교육권을 뒤로 한 채 물리적 행사와 법적 집행이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학교라는 곳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 아이들의 정당한 교육권에 대한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채 힘없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나 학교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힘을 이미 지니고 있다. 학교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의미와 함께 우리의 미래가 달린 신성한 영역이라는 명확한 인식만 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교육적 권리를 침해 하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는 쏫볼문화제에 대한 학생 참석에 대해 정부와 교육당국은 금지 않은 시선으로 학생들을 통제 하기도 했다. 때론 학교 선생님들이 현장에 파견해 학생들의 집회를 막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아니 학교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학교 선생님을 앞장세워 저지하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우리의 학생들의 교육적 권한이 얼마나 제한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학교는 분명히 이러한 학생들의 집회 참석의 의미를 교육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생으로서 올바른 집회참석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학교는 외부의 도전에 의해 이러한 교육적 권리가 봉쇄되어 버렸다. 과연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진정한 교육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학교는 그 자체적으로 당당한 교육적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억압과 도전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을 보장하도록 학교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고 우리 사회 또한 교육의 현상이 신성한 영역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

오목대

향교는 조선시대 관학(官學) 교육기관이다. 오늘날로 치면 지방의 공립 중고등학교인 셈이다. 서울에 국립대학인 성균관이 있고 그 밑에 4학(四學)과 지방에 향교를 둔 것이다.

향교의 기능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학(講學), 또 하나는 공자 등을 모시는 배향(配享)이다. 따라서 공간 배치도 두 가지로 나뉜다. 강학을 하는 명륜당과 배향을 하는 대성전이 그것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향교는 각 지방관청의 관할하에 부·대도호부·목에 90명, 도호부에 70명, 군에 50명, 현에 30명을 수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원 외에도 다수의 학생을 받았다. 여기에는 종6품의 교수와 정9품의 훈도가 있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재정은 국가에서 지급한 5-7결의 학전(學田)에서 거두는 세와 지방관이 나누어 준 전곡 및 오역 등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임진·병자란 이후 향교는 무력화 되어 강학기능이 쇠퇴하고 사학(私學)인 서원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문묘에 대한 제사만을 담당했다. 지금 향교는 전국적으로 120여 개, 도내에는 13개가 남아 있다.

전주시 교동에 자리한 전주향교(사적 379호)는 당초 경기전 복원에 있었다.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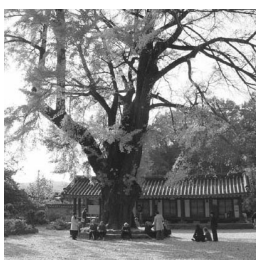
다 태조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들어서자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에 태조 영령이 편히 쉴 수 없다하여 화산(지금의 신흥학교 주변)으로 옮겼다. 화산으로 옮긴 향교는 부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도복이나 효랑이에게 화를 입을까 걱정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좌묘우사(左廟右社)에 어긋나는데다 정유재란으로 소실돼 선조때인 1603년 부성밖 풍림인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전주 향교의 명물은 400여년 된 은행나무다. 대성전과 명륜당 앞뜰에 각각 2그루씩 서 있는데, 가을날 금화(金貨)처럼 흔들리는 은행일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은행나무는 향교의 상징적 나무로, 은행나무가 별래를 타지 않듯 학생들도 건전하게 자라 바른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는 전주향교에 2010년까지 46억 원을 들여 방문객을 위한 문화공간과 완관본문화관을 조성키로 했다. 문화공간에는 유림회관과 충효예교육관 등이 들어오고, 완관본문화관은 조선시대 전주에서 인쇄된 각종 출판물을 전시·체험하는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인근 한옥마을과 무형문화전당, 오목대 이목대 등과 연계해 새로운 명소가 자리잡았으면 한다.

조상진 논설위원

## 전주 향교



## 전북만평

권 휘 원



독자여러분의 알찬 글을 기다립니다

이메일 desk@jjan.kr FAX 250-5580-5590

기고 내용은 본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社說

### 내년 국가예산 확보 지금부터

중앙부처의 내년 국가예산 편성시안을 앞두고 전북도의 주요 현안 사업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을 비롯 전북도가 전략사업으로 चु켜든 식품산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가 요구한 내년도 국가예산은 총 297건에 3조5195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여개 주요 현안사업을 포함 39건에 대해 중앙 부처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비해 새만금 방수제, 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비롯 전주~광양 고속도로사업등 SOC분야는 예산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계속사업이지만 지역개발의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김완주지사가 중앙부처를 방문해 현안사업의 국비반영을 적극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내각이 일괄시표를 제출해 놓아 각 부처마다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내년 예산안은 오는 6월말 까지 부처별로 편성된 시안에 대해 7~9월중 기획재정부 타당성 검토 작업을 벌인후 국회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가 요구하는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 확보가 중요하다. 모든 자치

단체가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 한 톨이라도 더 끌어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다음이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은 도내 정치권이 여당으로서 예산확보 작업이 수월했던 게 사실이다. 전북도 국가예산이 지난 2006년 3조원대 진입에 이어 4조원 시대를 눈앞에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도 이같은 정치여건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전북 정치권은 야당이 됐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부와의 소통 채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예산이 국회로 넘어오는 10월 부터는 도내 정치권의 활약 여부가 전북 현안의 정상 추진을 좌우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출신의원들이 적어도 1~2명은 예결위에 진입해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18대 국회가 아직 원구성을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략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 만은 없는 일이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하는데 힘쓰기 바란다.

### 주류까지 타지서 구매하는 대형마트

도내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이 지역 구매를 외면하면서 지역 자급만 역외로 유출시키고 있다. 이마트,롯데마트, 홈플러스, 헤마트, GS 마트 등 5개 유통업체들이 주류를 인근 광주와 경기도 업체로부터 구입하고 있다. 연간 이들 업체들이 주류구입비로 외지 업체에 보낸 돈은 연간 10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이마트 4곳과 롯데마트 한곳이 각각 광주광역시에서 그리고 홈플러스 3곳과 헤마트 2곳이 각각 경기도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자신들의 이윤 추구만 생각할 뿐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입장이다. 돈을 지역에서 벌면 그만큼 지역에 환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돈을 벌었으면 그 지역에도 세금도 내고 고용창출도 하는 것이 윈윈전략인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 도모만을 위해 원거리에서 있는 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다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업체들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류 소비자가 광주나 경기도 사람이란 말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전북에 주류도매상들이 없다면 얼마든지 외지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엄연히 도내에 내노라하는 업체들이 있는데도 외지에서 주류까지

공급 받는다는 건 결국 소비자를 끌보려는 처사 밖에 안된다.

유통업체들은 상생의 개념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역에 있는 소규모 구멍가게를 모두 문 닫게한 장본인들이 지역에는 환원 않고 돈만 벌어 가겠다는 발상은 자칫 소비자들로부터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우선 먹기는 곳감이 달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불매운동이라도 벌인다면 결국 대형유통업체들도 살아 남기가 힘들 것이다. 다행히도 흠에비나 롯데백화점은 도내 업체를 이용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들 업체들도 때로는 외지업체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도가 뒷인지를 잘 인식한 것 같다.

도내 연간 주류시장 규모는 2000억원대에 이른다. 이들 주류도매시장에 690여명이 고용돼 있다. 이를 감안해서 5개 대형유통업체가 주류를 도내에서 구입하면 300명 정도가 고용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류도매상의 매출에도 영향을 끼쳐 지방세 부담액이나 고용 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통업체들은 지역에서 상생하는 방안이 뒷인지를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주류나 지역 산품 구매를 늘리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익산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익산시와 금강방송이  
함께하는  
익산 흥겨운 Festival



KCN  
금강방송

- 6.21(토) PM7:00 \_ 금강 야외 가족영화제 \_ 익산 영등동 중앙체육공원
- 6.22(일) PM7:00 \_ 금강 야외 가족영화제 \_ 익산 배산체육공원
- 6.28(토) PM7:00 \_ 익산시민가요제 \_ 익산 영등동 중앙체육공원
- \*6.21(토) 예선 \_ 문의: 고도프로덕션 842-8057
- 6.29(일) PM7:00 \_ MBC프로게임단과 함께하는 "아마추어 게임대회" \_ 익산 영등동 중앙체육공원
- \*6.21(토) 예선 \_ 문의: KCN금강방송 고객센터 1544-5400
- 6.30(월) PM7:00 \_ "M.net 콘서트" "불꽃축제" \_ 익산 영등동 중앙체육공원

고객만족센터 1544-5400

보석과 문화관광의 도시 익산시 / 금강방송 디지털케이블TV, 금강DV

자세한 내용은 KCN금강방송 홈페이지(www.kcn.tv)를 참조하세요. (본 행사는 무료입니다.)